

여야 '지역구' 기싸움에 '정계개편' 까지

회정위, 원내 7개 정당에 선거구 입장 요청…내일 회의

여야, 통폐합 지역구 입장차… “회정 논의 이달 넘길듯”

올해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다. 최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과 한국당 간의 의견차가 크게 벌어지면서다.

8일 정치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정위는 지난달 말 원내 7개 정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우리공화당·민중당)을 향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당의 입장과 △당을 대표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할 진술인을 확정해 8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각 정당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는 여야 4+1 정당·정치그룹이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개정안에는 현행 253석 지역구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인구 증감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 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4+1 정당·정치그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라며 지난달 30일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선거법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소속 의원들이 농산어촌 지역구를 줄일 경우 이번 총선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 때문에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선 서울·경기지역 의석을 줄이는 방안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이에선 서울·강남·노원과 경기·군포·안산·단원구 등이 우선적인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됐다고 한다.

그러자 한국당은 호남 지역구 한 곳을 족집어 통·폐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구 상한선을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을 기준으로 삼아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와 인접한 고창 선거구를

통·폐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4+1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는 유성·대안신당·창당준비위원회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시·고창군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4+1 정당·정치그룹과 한국당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자 관련 사무를 맡은 회정위는 난처한 지경에 놓였다.

물론 회정위는 중앙선관위와 국회 산하 종립기관이다. 공직선거법은 회정위를 두고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자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회정위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며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에 입김을 불어넣을 길을 남겨뒀다.

회정위는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각 시도별 지역구 의원정수를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행안위 소속 여야 간사 의원들은 8일 비공개로 회동해 선거구 획정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행안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해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정위에 전달할 선거구 획정 관련 당의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4+1 협의체가 합의한 대로 농산어촌을 최대한 배려하는 선에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구를 통폐합할지, 선거구 관련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선거구 획정이 이번 달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이미 바른미래당에서 텁텁한 보수성향 의원들은 지난 5일 새로운 보수당을 공식 출범한 상황이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중심으로 법보수권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면 법보권에서도 협종연횡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회정위가 책임감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여야 협상에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1월달로 미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상황은 저의 책임…진심으로 사과”

지난 1년간의 침묵을 깨고 정계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영호남 화합과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추진했던 바른미래당의 현 상황은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당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과 디원동지 여러분께서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를 보내주셨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역사의 물줄기를 옮바른 방향으로 바꾸려는 순수한 의도였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설득이 부족했고 결과는 왜곡되고 말았다. 이 역시 모두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동안 정치를 그만둘지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저를

‘보수’ 28.4%
‘중도’ 17.0%
‘진보’ 9.6%

안정치노선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정치 재개 의향을 밝힌 안철수 전 의원의 최근 정치노선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답한 국민이 28%, ‘모름·무응답’이 45%로 조사됐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안전 의원의 정치노선에 대해 28.4%가 안전 의원의 정치노선에 대해 ‘보수적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체의 45%가 ‘모름·무응답’을 택해 유보적인 응답이 많이 나타났고, ‘중도적이다’는 응답은 17%, ‘진보적이다’라는 응답은 9.6%였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유보적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은 안전 의원의 정치 노선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많지 않은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안전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와 국민적인 인지도, 관심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세균 “선진화법, 20대 국회 최악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

“의회주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안되면 다수결 원리 작동시킬 수밖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의회주의의 대화,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되면 다수결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강행 처리를 지지·새로운 운송수단 의원이 비판하자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가짜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